

현장시선



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제주 경제의 버팀목인 건설산업이 전례 없는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제주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건설수주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49%, 2분기 70.6%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전국 평균 감소폭(8.4%)과 비교하면 제주 건설업계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준다.

지표의 하락은 현장의 비명으로 직결된다. 지난해에만 도내 건설업체 90곳이 문을 닫았고, 3만6000명에 달하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

건설산업 고사 위기, 대규모 공공사업이 ‘구원투수’ 돼야

3000명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사이 일자리의 36%가 증발한 셈이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고급리와 원자재·인건비 폭등에 미분양주택 증가라는 한계가 맞물려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기 하강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공공물량의 급격한 위축이다. 민간 건설시장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에서 공공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계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나 최근 제주 지역의 공공부분 발주 규모는 업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며,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건설 경제의 동력이 사실상 멈춰섰음을 의미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 및 민간 투자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2공항(5조4532억원)과 제주신항(3조8289억원) 사업은 갈등 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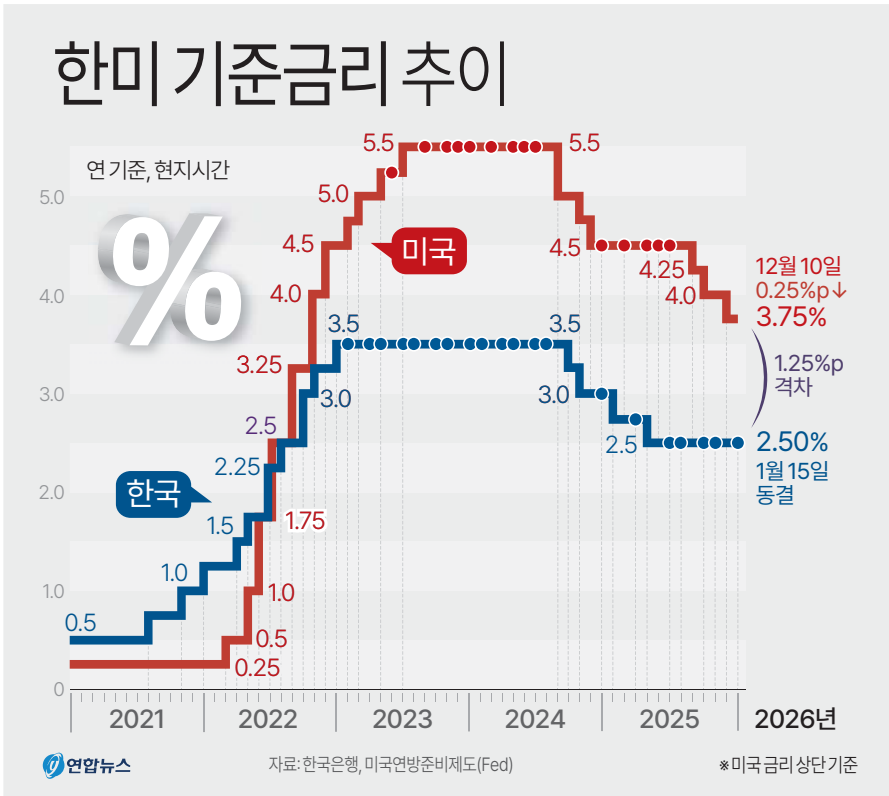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나 신천리 리조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역시 인허가 단계의 진통과 찬반 갈등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으로 도로 공사 재개 등 물량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는 약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삼양·동북 복합 발전소 및 가스배관 매설공사)은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를 되살릴 가장 현실적인 ‘마중물’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이 사업들이 내년에 적기 착공된다면 얼어붙은 시장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가치는 경기 부양 그 이상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 첫째, 사업 주체인 에너지 공기업은 ‘상생형 프로젝트’의 전형을 보여야 한다. 제주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장비·자재를 우선 조달해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정과 행정시는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행정적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회는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이 동행해야 한다는 대승적 이해를 보여줘야 한다. 건설산업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도민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탱하는 민생 경제의 뿌리다. 이번 에너지 공공사업으로 제주의 청정 에너지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재작동하길 촉구하며, 협회 또한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등록면허가 계속된다면 등록면허세 납부를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1월,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다. 세금 부분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받는 시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과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잡아업 등 각종 업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

든 영역에 걸쳐 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4만5000원~7500원, 읍·면지역은 2만7000원~4500원으로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등록면허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안내된 가상계좌나 사용하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과 ARS(1422-11)을 통해 카드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부서에 꼭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어구관리제도 대폭 강화 늦었지만 다행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폐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와 관리대책 수립이 주요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4월23일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포함됐다. 또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도 도입된다.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도 시행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근해어업부터 시행한 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

리방법을 비롯한 비용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어구관리제도는 세부적인 기준이 미약해 현장 적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를 폐어구가 골칫거리였다. 도내 어선뿐만 아니라 육지부, 중국 어선까지 제주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몰래 버린 폐어구가 매년 1만t이 넘고 있다. 폐어구는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해양동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효적인 대책이다. 수산당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주 일회용품 보증금제 확대 잘하고 있다

정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해 눈치를 보는 사이 제주도가 15일 시행 의무화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법을 개정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대화용컵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이 저조한 점을 내세워 '컵 따로 계산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23년 50.5%, 2024년 54.5%에서 지난해의 경우 60.0%로 오르는 등 도민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오히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이 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정해야 하는 점도 이해하지만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정부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규진(선진인쇄사 사장(대표) · 향년 6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6일

배우자 손정순
아들 강태인
딸 강경연
사위 김성엽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하공 장윤(前 애월농협 조합장,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6일

배우자 김순희
아들 하성엽
며느리 김경선
홍옥순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전근현(1962. 03. 25. 생)
- 최후주소 : 제주도 동문로16길 11-7, (일도이동)

상기자는 2025년 9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민612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화상북로 87, 104동 704호 (삼양이동, 엔에이치에프제주상화1단지)

2026. 1. 16.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전소영, 전소희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도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